

이재명 “단군이라 최대 5500억 공익 환수”

여야, 국감 2라운드서 재격돌 초과이익환수 조항 왜 빠졌나 ‘그분=이재명’ 말한 것 사과하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재격돌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정문화 2라운드’ 격이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연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야기된 집값, 전월셋값 폭등으로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고 이 와중에 LH 사태가 터져서 국민 분노를 더 가중시켜 왔다”며 “이 와중에 1조원에 육박한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특혜가 터져서 국민 분노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은 이 후보가 ‘부패한 직원인 빌’이라 선을 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성남시장이 되고 유동규가 얼마 안 돼 임명했는데 인사 지시했는지 명확히 답을 안했다. 이 사람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가 “글쎄 모르겠다”, “임명과정 자체가 기억 안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전혀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걸로 이해하겠다”고 정리했고, 다시 이 후보가 “그렇게 단언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하는 등 위증 논란을 염두에 둔 신경전을 벌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 후보를 겨냥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이 분통 터져하는 게 뭐냐. 어떻게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이라며 이 후보에게 “택지 사업의 수익 중 5500억원을 확보해 70%를 확보했다는 것은 맞는 말씀 같은데,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에서는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며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이 벗어나기 시작한 건 ‘그분’이란 말이 등장하면서부터다. 행안위 국감이 ‘그분 국감’이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벗어나 국감 본연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분’이 처음 나온 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인데 그것만으론 그분이 남성, 여성, 젊은이, 어르신, 단체, 개인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남측 변호사’ 녹취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국감

발언 영상을 든 뒤 “‘그분’이라는 존재는 국민의힘에게 움직일수록 빠져서 자신을 삼키는 늪과 같은 존재다.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이유없이 ‘그분’을 이재명이라 말하는 것에 사과하고 빠져나오라”고 직격했다. 또 “행안위에서 조폭 운운한 김용판 의원이 사과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강준현 의원은 야당을 향해 “경기도 국감인데 질 의에서 대장동 국감이라고 표현했다. 경기도 국감이다”라고 지적한 뒤 “LH의 공공개발을 의도적으로 포기시키고 민간사업자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최소화 설계한 사람은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국민의힘 세력”이라 했다. 민주당 소속 조웅천 국토위원장은 이 후보 답변이 길다고 항의하는 야당에 “그럼 답변할 기회를 주시라”, “진행은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고성으로 맞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는 “대장동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것을 5500억원, 70%를 공공환수를 해 낸 모범적 사례”라며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사업에서 부당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득은 시민에게 돌려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새 달라진 이재명...웃음기 거두고 신상공세 차단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두 번째 국정감사에 지난 18일 국감 때와는 다소 다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도정 현황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 다음 “제가 이틀새 국감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는 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특히나 법에 정한 한계

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법률에 기인한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제한하도록...제가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말을 조금 머뭇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답변을 국감 취지에 맞는 질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이틀 전 국감에서 “의원님들 시간이 아까울 것 같으니 세세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며 각종 공세에 맞서 ‘정면 돌파’의 결기를 드러낸 것과는 비교됐다. 18일 국감장에서 ‘조폭연루

설’이 나오자 선보인 ‘흐흐흐’ 등 12번의 웃음소리는 이날 오전엔 찾기 어려웠다. 야당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국감에 앞서서 ‘초과이익환수제 건의의 불수용 주체는 누구나’, ‘지사직 사퇴는 언제 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연신 “미안합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18일 국감 전에 20여 분 동안 취재진과 여러 현안에 대해 상세한 문답을 나눴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는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사실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고 짚막하게 답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카지노사업자 지도·감독 10년간 한건도 없어

이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구) 국회의원이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카지노업을 비롯한 복권, 경마, 경정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감위가 카지노 영업현장 감독을 통해 최근 10년간 469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 했으나 감독내역 전체가 ‘이용자의 구매상한 미준수’로, 카지노사업자의 운영 및 경영상의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카지노업은 현금거래가 많아 타 업종보다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가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운영에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박장 개설 행위를 사업자들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병훈 의원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지금껏 카지노사업자가 사감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향후 온라인카지노로 규모와 방식이 확대될 경우 카지노업에 대한 감시기능의 부재는 더 큰 사회문제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5t 미만 어선 ‘비개방 정밀검사’ 실효성 의문

주철현 국회의원

10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어선 정기검사에서 5t 미만에 한하여 도입된 ‘비개방 정밀검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정감사를 통해 “10t 미만 어선들은 10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기관을 개방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올해부터 어민들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 5t 미만 어선에 대해 비개방정밀검사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 9월까지 검사 선박 676척 중, 7.7%에 불과한 52척만 새로 도입된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92.3%에 달하는 624척이 기존대로 기관 개방검사를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 해 9월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올해 1월1일부터는 5t 미만 어선에 한해서는 어업인들의 선택에 따라 비개방정밀검사



가 가능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기존 10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 기관개방검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은 후 오히려 선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기관개방검사를 위해 어선의 엔진, 보조기관, 축 등 기관설비 등을 모두 개방하여 검사하면 검사비용도 4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이 들기도 하고 2주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보니,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주철현 의원은 “비개방정밀검사가 어업인들에게 선택 받지 못한 이유가 홍보 부족 때문인지, 검사제도의 내용이나 절차에 미비한 사항이 없는지 분석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개발이익 환수 여야 공감대...특별법 만들 것”

송영길 대표, 소상공인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대장동 논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여야가 합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공공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이상 환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 대표는 또 “이달 말까지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워드 코로나로 들어간다”며 “방역을 완전히 풀지는 못해도 상당 부분 완화하며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부동산 가격이 소강상태인데 공급을 늘리려면 시간이 걸리니 사전정약을 받아 (부동산을) 공급해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기름값도 오른 상황인 만큼 (정부에) 유류세 조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한속박업중앙회, 전국지하도상가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 |
|--|--|
| 상가매매 (상무지구) | 장성 토지 (매매 분양) |
|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p> |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p> <p>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
| 010-6670-9800 | 010-6670-9800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